캠퍼스 낭만 대신…슬기로운 대학 생활

지역 대학생들, 해외연수 등 학교 시행 사업·프로그램 참여 늘어

자소서 채우고 생활비 아끼고…졸업 후에도 남아 장비·시설 이용

광주·전남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찾기 보다 일명 '등록금 뽕 뽑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다시 캠퍼스를 누비게 됐지만,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 보다 등록금을 낸 만큼 알차게 이용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난에 고정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 길어지자 부모에게 마냥 손 벌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른바 등록금 '뽕'을 뽑는 방식으로는 대학생용 각종 프로그램 다운부터 전자제품 할인은 기본이다.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정보 얻기부터 해외여행, 크라우드 펀딩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자소서도 채우고 생활비도 아끼며 경험을 쌓는 등 방식은 다양하다.

강백선(28)씨는 전남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지만 아직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 졸업생을 위해 학교에 마련된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평소 관심이 있던 3D프린터가 고가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만들마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남대 '만들마루'에는 3D프린터기와 3D블렌딩, 실사 출력 등의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강씨는 이 3D프린터를 활용해 DIY키트 'Try To Write'를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으로 2100만원을 후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3D프린터기를 배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학원비와 장비 대여료 등을 아낀 것이다. 강씨는 "사비를 들이지 않고 펀딩까지 도전해볼 수 있었다"면서 "졸업 전에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대학 생활 사례

- 3D프린터 활용 펀딩 진행 2100만원 모금
- 6개월간 미국 체험연수·동남아 교육기행
- 취업 강의 들으며 정보 얻고 지원금 받고
- 창업동아리 활용 '광주빵' 브랜드 개발

재학 중 또는 취업준비 기간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해외여행을 학교지원을 받아 떠나는 이들도 있다.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선미리(여·22)씨는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계교육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 참여 학생은 총 21개팀 130여명으로, 동남아 지역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서류와 면접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3대1 경쟁률을 뚫었다.

선씨는 "학교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입학할 때 지불한 등록금 '뽕'을 다 뽑은 기분"이라며 "높은 경쟁을 뚫고 떠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워올 생각"이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대 학생 45명도 올해 'K-MOVE' 미국 체험연수에 나선다. 이들은 6개월간 미국 연수를 경험하고 1년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미국은 사비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닐 뿐더러 인턴십까지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1년 이내 졸업 예정자나 4학년 재학생 위주로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취업 정보를 얻으면서 지원금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조선대 기계공학과 최보근(25)씨는 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재맞고'(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신청했다.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던 최씨는 학교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최씨는 AI활용 직업탐색,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목표직업 설정, 취업역량 진단까지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학교의 '케어'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업 관련 강의를 듣고 학교에 수료증을 제출하면 최대 25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4학년이라 취업 관련 정보가 간절한데, 재맞고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며 "취업 정보도 얻고 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학교를 이용해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원금을 통해 학교에 낸 등록금을 보전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한경주(여·26)씨는 얼마 전 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그램(KWU Maker)을 통해 우리 밀을 활용한 '광주빵' 브랜드를 만들었다.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학교 혁신인재 장학금 6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베이킹은 상상 이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 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의 브랜드까지 만들 수 있었다"며 "교재비, 간식, 문구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감이 줄었고 덕분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전공과 자격증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남구 통일효도열차 달렸다 광주시 남구가 진행한 '2023 상반기 남구 통일 효도열차'가 1일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했다. 열차는 336명의 승객을 싣고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DMA(비무장 지대)를 둘러본 후 도라산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기도 파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응급실 뺑뺑이' 10건 중 3건 '전문의 부재' 탓

광주·전남 5년간 2588건 재이송

광주·전남에서 119구급대에 실려가면서도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한 사례 10건 중 3건이 '전문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비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총 2588건의 119구급대 재이송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차 재이송이 609건, 2차 재이송이 146건 이뤄졌으며 전남에서는 1차 재이송 1500건, 2차 재이송 33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전문의 부재' 때문에 재이송이 이뤄진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광주는 755건 중 184건(24%), 전남은 1833건 중 594건(32%)이 여기에 해당했다. 또 '병상 부족' 사유도 광주 73건(9%), 전남 202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는 '환자·보호자 변심' 사유가 광주 25건(3%)·전남 48건(2%), '1차 응급 처치' 사유가 광주 20건(2%)·전남 40건(2%)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의료 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시동' 걸었지만…

광주시, 토지 강제 수용 결정…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지난 2006년 이후 보상금 문제 등으로 조합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가 보상금 합의를 거부한 주민들이 가진 토지와 물건 등을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누문동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결정했다"며 이의 제기 및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8일 토지수용위 심의를 열고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시행자가 누문동 주민 176명의 토지와 물건을 수용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재결했다. 또 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066억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용재결서는 5월 26일 누문동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토지수용위는 손실보상금 1066억원은 별도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며 이 이상 증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을 보낸 점을 성실한 협의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우편 수령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17일 수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발 목소리를 냈다.

이홍용 누문구역정상화추진단 대표는 "우편으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볼 수 없고, 그 우편조차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보상비에 이주비·이사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고, 액수가 턱없이 적어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관련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문 비공개 정당"

2015년 12월 28일 한국·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jusbh@·연합뉴스